

#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6. 11 밀양 행정대집행- 국가폭력과 반인권으로 점철된 진압작전



2014년 6월 25일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법률지원단

# 목 차

## I . 밀양 농성장 행정대집행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상황 보고

(6월 10일, 11일 - 날짜가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것은 11일 상황임)

■ 붙임자료 - 각 농성장 별 행정대집행 당일 일지

(6월 10일, 11일 / 송전탑 예정지 129번, 127번, 115번, 101번 농성장)

## II . 6.11 행정대집행 법률적 검토의견

# I . 밀양 농성장 행정대집행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상황 보고

## 1. 들어가며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2014년 6월 11일에 있었던 밀양 농성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6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송전탑 공사현장 네 곳(129번, 127번, 115번, 101번)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
- 2)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 9) 주민재산 훼손

이 모든 것은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을 경찰이 주도하면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작년 5월 공사 재개 후 열흘간, 그리고 10월 공사 재개 후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은 인권침해 상황은 한 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한 번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곁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인과 연대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폭력의 상흔을 남겼다.

## 2. 인권침해상황

### 1)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

6월 11일 밀양에서 있었던 행정대집행은 정상적 경찰력 사용이 아닌 경찰력 남용이며, 평화적 시위에 대한 '진압작전'으로 재규명 되어야 한다. 유엔의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법집행관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공익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공권력 사용은 반드시 적법한 법집행 목적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

은 가능한 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력은 20개 중대 2000여 명이다. 각 농성장 별로 시차를 두고 행정대집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병력이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성자 수에 비추어 ‘압도적’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각 농성장 별로 지키고 있던 주민과 종교인, 연대자는 50여명에 불과하였다.

<사례> 좁은 공간에 있는 소수의 농성자를 진압하고자 투입된 과도한 경찰병력  
행정대집행 과정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127번 움막의 경우 오전 8시 50분경 움막 정면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은 지 1~2분도 채 되지 않아 마치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하듯이 움막 뒤편으로 경찰력이 들이닥쳤다. 경찰이 움막 뒤편을 포함해 4면 모두 철조망을 타고 들어와 절단기와 가위를 들고 움막해체작업을 시작했다. 농성장 움막에 경찰이 진입한 후, 경찰과 기자, 연대자가 뒤엉킨 비좁고 위험한 상황에서 육중한 절단기가 농성자들의 손과 다리 위, 머리 위, 그리고 절단 작업을 하는 경찰들 사이로 전달되고 오갔다.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도 경찰 지휘관은 소리를 지르며 “고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등 오로지 농성자들의 진압에만 몰두했다.

127번 움막 안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쇠사슬 절단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경찰이 밀쳐내면서 천막 코너에 있던 고령의 주민과 수녀 위로 기자들 무리가 한 번에 넘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수녀는 허리에 찬 쇠사슬에 채여 고꾸라지기도 했다.

115번 움막에서 경찰은 농성장 철거를 시작하면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한 경찰기동대원은 주민을 끌어내 고착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해당 기동대원에게 사실 확인과 성명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자리를 피했다. 경향신문 기자의 사진을 통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동대원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129번\_ 농성움막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서는 경찰병력,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1번\_ 농성장을 몇 겹으로 에워싼 경찰병력, 뒤쪽으로 안전모를 쓴 한전직원들이 대기 중이다.

## 2) 농성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진압

대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경찰은 물리력 행사에만 몰두했다. 4곳 농성옴막 대부분 산에 위치하여 주변 경사가 가파르다는 점,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여성이며, 오랫동안 농성을 해오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된 진압 작전으로 크고 작은 부상이 속출하고 실신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주민들의 신체 위로 절단기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등의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경찰은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하였고, 공포감과 더불어 여성 농성자에게는 수치심마저 느끼게 하는 진압 작전을 강행하였다.

### <사례1> 농성자 다수가 여성이었음에도 남성경찰이 주도하여 진압

129번 옴막 옆 일부 주민들이 농성 중이던 구덩이로 진입하는 시도는 남성경찰에 의해 시작되었다. 구덩이 안에 있는 주민들 중 일부가 옷을 벗은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초기에 여성경찰을 투입하지 않고, 남성경찰들이 주도하여 알몸 상태의 여성주민을 제압하였다. 경찰은 살에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절단기로 쇠사슬을 잘라낸 뒤 주민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대해 연대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야 여성경찰을 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남성경찰과 여성경찰이 혼재되어 있었다.

경찰은 농성 옴막 바깥으로 주민, 수녀, 신부, 연대자 등을 끌어낸 뒤 곳곳에서 고립시켰다. 여경들이 와서 여성 지킴이들과 수녀들을 끌어낸 후에는 남성경찰을 동원하여 둘러쌌다. 남성경찰들은 수녀와 여성 지킴이들을 둘러싼 뒤, 바깥 조여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소속, 지휘, 근거 등을 물어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성경찰들이 둘러싸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들이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조금의 저항이라도 하면 남성경찰이 투입되어 여성을 들어내려는 시도가 반복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사지가 들려나오는 상황에서 옷이 올라가고 흐트러지면서 속살이 드러났다. 수녀들의 경우, 강압적으로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정결을 상징하는 베일이 강제로 벗겨졌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를 무시로 일관하면서, 이를 남성경찰들은 그대로 지켜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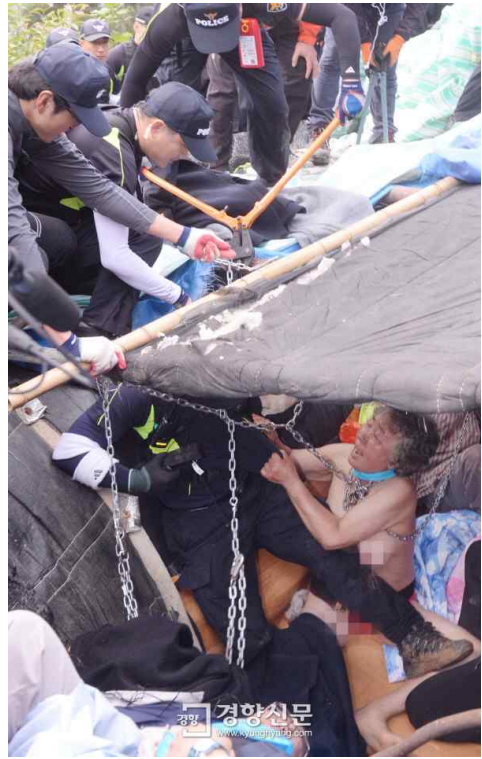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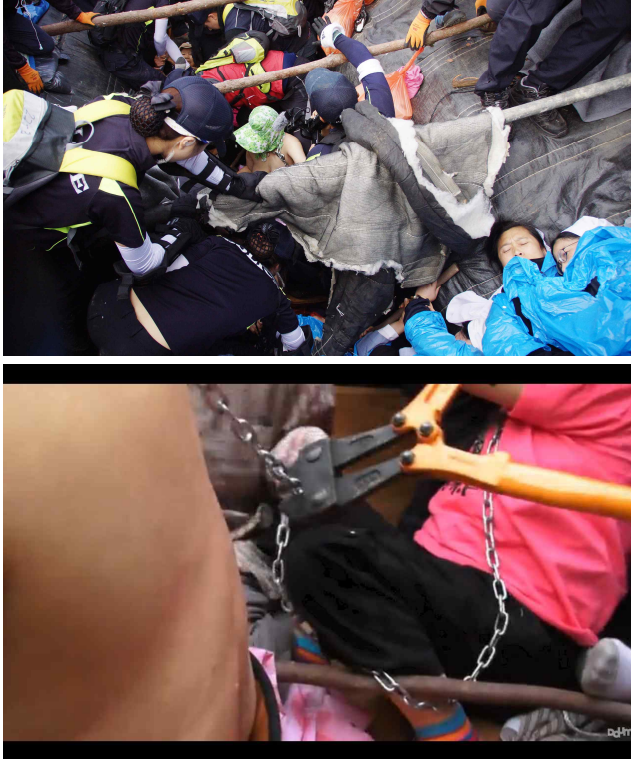
127번 옴막 안 쇠사슬 절단 작업에 몰두한 경찰은 여성 농성자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다. 어떤 남성경찰들은 여성 농성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러가면서 무리하게 쇠사슬을 절단했다.

115번 옴막 안에서 쇠사슬을 두르고 있던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들이었음에도 절단기 등으로 쇠사슬을 끊고 이들을 진압한 것은 남자경찰들과 남자공무원들이었다.

101번 옴막 안에 경찰 투입되었을 때,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압은 남성경찰 뿐이었으며 여성 농성자를 붙잡고선 쇠사슬을 끊고 보란 듯이 커



터로 움막을 찢었다.



▲ 129번\_몸이 뒹어진 상태의 수녀들, 그 옆으로 구덩이 안에 있는 알몸의 주민들에게 남성경찰들은 절단기를 들이대며 제압하였다.

#### <사례2>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철거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진압

129번 움막 한편은 심한 경사로여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지만, 대거 병력을 투입하면서 경찰은 거침없이 연대자들을 밀치고 들어왔다. 경사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다수의 수녀들이 몸이 뒹어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그 위를 거침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서로의 팔을 붙들고 있던 상태의 수녀들을 강제로 뜯어내면서 팔이 심하게 멍들거나 다쳤으며, ‘외방선교회’ 소속 수녀 4명은 응급후송 되었다.

움막 옆 구덩이에는 한\*\* 씨 등 6명의 주민들이 알몸 상태로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있던 좁고 낮은 구덩이 위로 덮인 얇은 천 위로 경찰들이 올라선 뒤 거침없이 커터칼로 찢었다. 경찰의 무게로 곳곳이 움푹 내려앉아 주민이 깔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저 안에 할매들이 있다”며 항의해도 경찰은 천을 찢고 구덩이 안 주민들을 들어내기 위한 작업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115번 움막에서 경찰은 주민과 연대자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일부는 사지를 들어 강압적으로 이동시켰다. 그 과정에서 찰과상이 빈번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도 발생됐다. 연대자 중 강\*\* 씨는 허리부상을 입었고, ‘사랑의 시튼 수녀회’ 소속 김\*\* 수녀는 팔이 골절되어 모두 응급후송 되었다.

101번 움막은 차량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산 정상에 위치해있다. 오후 4시경 진입한

경찰은 연대자들이 움막 파이프에 몸을 묶고 연좌해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제로 뜯어내고, 펜치와 절단기를 들어 움막을 해체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몸통이 조여지고 당겨지면서 대다수가 고통을 호소했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가운데 4명은 헬기로 응급후송되었다.



▲115번\_ 경찰이 수녀들과 연대자들을 제압하고 주민들의 몸에 묶은 쇠사슬을 끊고 있다.



▲101번\_ 움막 안 주민의 머리를 짓누른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쇠사슬을 절단하려는 경찰

### 3) 경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통행 제한

행정대집행 하루 전부터 경찰병력은 농성장 주변으로 가는 모든 길을 봉쇄하였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공권력 집행으로 주민과 연대자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량 반입을 제지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외면하였다. 경찰은 통행 제한의 이유로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이로 인해 안전한 길을 두고 위험한 산길을 타게 했으며,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항의하던 주민이 탈진하는 상황마저 초래하였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행해져야 하지만 경찰은 자의적 판단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 <사례1> 연대자들, 심지어 주민에 대해서도 통행을 제한

115번 움막 주변 경찰은 대집행 전날인 10일 오후부터 마을주민과 연대자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오후 8시 경, 농성장 가까이로 차를 타고 들어가려는 수녀들과 인권침해감시단의 출입을 막고 농성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한 후 걸어가도록 하였다. 대집행 당일 오전 10시 경 115번 농성장으로 가려는 연대자 6명을 경찰이 곳곳에서 고착하였다. 연대자 1명씩 각각 경찰벽으로 좁은 공간을 만들어 퇴로 없이 고착하고 있던 것에 인권침해감시단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약간의 퇴로를 벌려두었다. 고착이유를 묻자, 지휘관은 “115번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고 연대자들이 가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여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감시단이 항의하자 지휘관은 “저 사람들을 아느냐,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며 행정대집행이 끝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을 입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러 시청직원, 한전직원, 경찰병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인근 비닐하우스쪽에 있었던 주민 두 명이 농성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경찰이 통

행을 막았다.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인권침해감시단의 항의, 내 발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모두 외면하면서 경찰은 계속 통행을 막았다.

101번 읍막은 30여분 등산을 해야 도착하는 산 속에 위치했기에, 주민들이 고립될 소지가 더 높았다. 이를 염려한 연대자들의 발길은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인해 묶였다. 6월 10일 밤부터 길이 아닌 곳으로 산을 타면서 새벽에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사례2> 식량반입까지 막은 반인도적이고 과도한 통제

127번 읍막으로 전달할 김밥을 갖고 10일 오후 6시 30분경 연대자 2인이 왔지만, 경찰이 저지하여 통행이 불가능했다. 항의 끝에 장동 입구 읍막으로 경찰이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밥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장동 입구에서부터 통행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김제연, 김미희, 김제남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을 제외하고 경찰은 변호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김밥 전달을 막을 때 경찰은 통행 제한의 근거를 아예 대지 않았고, 변호인을 차단할 때는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101번 현장에서는 6월 10일 오후부터 읍막으로 오르는 산 입구 뿐만 아니라 용희마을 입구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했다. 주민 외에 경찰청이 발급한 비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경찰이 통행을 금지했다. 오후 7시 경 인권침해감시단 2인이 용희마을 입구인 용희교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다. “주민 외에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과도한 통행 제한의 이유가 무엇인지, 농성장에 저녁식사를 갖다주는 것도 막을 것인지, 인권옹호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인권침해감시단이 묻자, 경찰은 “경직법 5조에 의해 통행을 제한하며, 식사는 용희교까지 농성자가 내려와서 받아 가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활동이라 해도 비표 없이는 통행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식사 전달을 하고자 왔던 밀양대책위 활동가가 국가인권위 직원에게 저녁식사 반입에 대해 요청하자 국가인권위 직원은 “경찰이 가져다주면 안되겠냐”고 답변하였다.

#### <사례3> 종교활동을 위해 향하는 종교인들을 억압

129번, 127번 읍막으로 올라가는 장동마을 입구는 10일 정오부터 경찰이 배치되어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종교활동을 위해 대전에서 수녀 여덟 명이 장동입구에 도착했으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지당했다. 길을 막는 이유를 물으니 경찰은 ‘사고예방’이라고만 밝혔다. “송전탑 관련 민원이 들어와 막고 있다”고 한 경찰도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경찰은 타고온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경 조정태 국회의원의 중재로 여덟 명 중 네 명만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115번 현장의 경우 6월 10일 밤 10시 경, 천주교 신부 한 명이 농성장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은 한 시간 가량 막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현식 대장(경비교통과 작전의경계장)은 서\*\* 신부에게 농성장에 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고 서\*\* 신부가 “밀양주민과, 수녀들과 연대하는 종교활동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자 김현식 대장은 “정



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과 연대자들은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경찰이 종교인의 양심을 재단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사과하지 않은 채 한 시간 가까이 신부를 억류했던 것을 풀고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129번\_ 장동입구에서 약 3시간 동안 출입을 제지당한 수녀들 일부가 의원 중재로 들어왔다.



▲101번\_ 용희마을로 들어가는 용희교를 원천봉쇄한 경찰들 ▲115번\_ 밭에 가려는 주민을 막아선 경찰



#### 4)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견된 변호인단 또한 10일부터 과도하게 통행 제한을 하는 경찰에 의해 막혔다. 11일 당일에도 움막에서 끌려나와 고착 상태에 놓여 있는 농성자들에 대해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신변안전이라는 핑계를 대며 강제 고착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발생하였다.

##### <사례> 변호사들의 이동을 제한하며 농성자에 대한 접견권을 원천봉쇄

127번 움막으로 가고자 했던 변호사들이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장동마을 움막 앞에서 경찰의 제지로 인해 이동이 차단되었다. 주민들의 위임장이 있음을 내세웠지만 역시 통행이 제한되었다. 변호사들은 위험을 감수한 밤길 산행을 통해서야 11일 새벽 3시경 127번 움막에 다다를 수 있었다.

127번 움막 안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던 김\*\* 변호사가 고착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

사관의 항의로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여경 2명에게 강제로 ‘이동조치’ 되었으며, 경찰은 강제이동 조치의 이유로 ‘신변안전’을 이야기하였다.

고착 당한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신\*\* 변호사는 농성대오와 함께 강제 고착 당했다. 경찰 지휘관에게 변호인을 고착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지휘관은 하급 경찰대원들만 남긴 채 답변하지 않고 사라졌다. 신\*\* 변호사는 김제남 의원 보좌관과 함께 김의원의 안전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시점까지 경찰‘벽’에 막혀 움막 위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101번 움막에 오후 4시 경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을 필두로 경찰병력, 그 뒤를 이어 시청공무원들이 진입하였다. 배\*\* 변호사가 확성기를 통해 ‘적법절차를 밟아 공권력을 집행할 것, 부상 없이 진행할 것, 인권침해감시단의 인권옹호활동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 행사로 부상자는 속출했고, 감시단은 강제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고착된 주민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요구는 무시되었다.



▲6월 10일 저녁 127번과 129번으로 가는 장동 ▲127번\_ 움막 안에 있다가 여경에 의해 강제로 이동  
마을 입구 앞에서 원천봉쇄 당한 변호사들 된 뒤 고착 당한 김\*\* 변호사

## 5)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의 책무성 방기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 및 조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막고, 현장 바깥으로 기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주민의 대화요청을 거부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움막을 철거하고 주민과 연대자를 끌어내는 것에만 몰두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 <사례1> 인권침해감시단, 국회의원 보좌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까지 모두 차단

127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을 감시하고자 온 인권침해감시단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온 변호사가 모두 ‘강제이동’ 조치되었다. ‘강제이동’ 조치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127번 움막에 있던 김제남 의원실 보좌관 역시 신분증을 보여주며 공무 집행 중이라고 항의했으나 ‘강제이동’ 조치되었다. 101번 움막에서도 마찬가지로 장하나 의원실 보좌관 역시 강제이동 되어 고착당하기도 했다.

127번 움막 안에서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움막 밖으로 이동조치 되었다.

#### **<사례2> 취재를 방해하며 기자들을 가로막은 경찰**

사전에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 기자들의 취재는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들은 취재 기자들을 밀쳐 내거나 사진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127번 움막에서 취재 중이던 최\*\* 기자의 경우, 여성 경찰들이 강제로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취재 중인 기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움막 바깥으로 밀려나왔다.

#### **<사례3> 대화 요구 외면한 채 일방적인 집행만을 강행**

115번의 경우 밀양시청 공무원은 해당움막과 약 50m 떨어진 입구 부근에 있던 소수의 농성자에게 행정대집행 증표를 제시하고 집행을 고지하였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전달하려는 일체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이같은 고지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101번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에게 움막 지붕 위에서 연좌하던 조\*\* 신부가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면담을) 하고 안하고는 내 마음이니까 (내려와 자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라”고 답변하였다.

#### **<사례4> 익명성 뒤의 공권력**

10일과 11일 모든 현장에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대기 중인 경찰 일부는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었으나,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움막 안에 진입한 경찰의 경우 이름표가 대부분 조끼에 가려져 있고, 신분 표식이 없는 제복을 입거나 정복이 아닌 사복 상태라 신분확인이 불가능했다. 채증, 강제이동, 고착 등의 상황에서 이같은 공권력 집행을 이유와 함께 소속과 신분을 묻는 농성자들에게 경찰은 외면으로 일관하였다.

### **6) 과도하고 무분별한 채증과 사찰**

행정대집행 과정 전반에서 경찰은 수없이 많은 채증 장비를 동원하여 마구잡이식 채증을 일삼았다. 대법원에서는 영장 없는 채증에 대해 범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일 경우,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지난 4월 채증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사복경찰의 채증은 매우 심각했고, 이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은 아예 묵살 당했다. 주민과 연대자들이 움막 바깥으로 끌려나와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무분별한 채증은 지속되었다. 심지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응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채증을 계속 할 뿐이었다.



▲129번\_ 사지가 들린 채 경찰에 의해 강제이동 당하는 인권침해감시단



▲127번\_ 김제남 의원실 보좌관을 움막 바깥으로 강제로 이동 시키는 경찰

#### <사례1> 응급환자 발생에서 응급조치는 외면, 오직 채증만 할 뿐인 경찰

127번 움막 바깥으로 끌려나와 고착된 상태로 동래댁 할머니가 정신을 잃고 손발에 경련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이 손발을 주무르고 부채질 하면서 경찰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성을 보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할머니를 향해 채증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 <사례2>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채증을 진행함

129번 오전 6시 30분 경, 시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시작한다는 고지 직후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수백 명의 경찰병력 곳곳 수많은 채증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었다. 움막 주변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던 연대자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채증을 했고, 강압적으로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채증카메라가 따라붙었다.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 밖으로 밀려나와 고립되어 있는 연대자들을 향해서도 채증은 멈추지 않았다.

101번 오후 4시 10분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기 전, 대기 중이던 상태에서도 경찰과 한전 직원은 주민과 연대자를 채증하였다. 아무런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채증으로 불필요하게 주민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감시단이 요구했지만, 그 순간 자리를 피할 뿐 채증 행위는 계속 되었다.

#### <사례3> 채증하는 이유와 채증하는 경찰의 신원을 밝히지 않음

모든 현장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는 단계에서부터 채증이 시작되어 대집행과정 내내 무분별한 채증이 지속되었고, 사복경찰이 채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목격되었다. 정복을 입은 경우에도 조끼에 가려져 이름표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찰이 많았고, 채증하는 이유와 담당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물어도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사례4> 기자 사칭하면서 사찰하는 경찰

사전에 경남경찰청은 현장에서 농성주민과 취재기자를 구분하는 용도로 언론사별 비표를 배포하였다. 그 비표를 이용하여 경찰이 기자를 사칭하면서 현장에 있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국제신문 비표를 걸고 있던 경찰이 국제신문 기자에 의해 이미 발각되었는데, 행정대집행이 끝난 129번 현장 부근에서 같은 경찰이 또다시 MBN 비표를 건 상태로 있다가 발각되었다. MBN 기자가 아닌데 왜 비표를 걸고 있는지 질문하자, 해당 경찰은 자신은 경남경찰청 공보담당관으로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것일 뿐 취재는 하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답변하였다.



▲129번\_ 끌려나오는 수녀님 주변 곳곳 경찰 ▲언론사에 배포된 비표를 걸고 기자를 사칭한 경찰의 채증카메라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

### 7) 비웃고 폭언하며 조롱하는 공권력

작년부터 이어진 공사 재개 과정에서 동원된 경찰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주민들은 증언해왔다.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움막 철거와 함께 농성자들 또한 치워버리면 그만인 물건처럼 취급하였다. 각 움막별로 불과 20~40여분 만에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만큼 단시간에 이루어진 폭력적인 진압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경찰 간부들은 “빨리 해치워버렸다”며 깔깔대기도 하였다. 폭력 진압, 불법적인 채증과 고착 등의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비웃고 폭언하며 힘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의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 <사례1> 주민과 연대자에게 거침없이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경찰

129번 오전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움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을 밀양경찰서 정보과장은 힘으로 제압하며 폭언을 해댔다. 오후 101번 현장에서도 거침없이 주민에게 막말하면서 밀어내는 밀양경찰서 정보과장이 목격되었고,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실 보좌관이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 <사례2> 응급 후송되는 상황에서조차 조롱하고 진압을 자축하는 경찰

127번 움막 철거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끌려나온 주민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응급 상황에서 “어르신이 숨이 가쁘다. 빨리 들 것을 가져와달라” 요구하는 대책위 활동가에게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하였다.

101번 움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의 병원 후송이 더딘 상태에서 여전히 헬기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서는 일부 경찰들이 진압작전을 기념하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단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주민을 힘으로 제압하며 폭언하는 밀양경찰서 정보과장



▲129번\_ 강압적으로 끌려나온 뒤 기도하는 수녀들을 향해 웃으면서 계속 채증하는 경찰



▲101번\_ 대기 중인 김수환 밀양경찰서장(가운데)은 면담 요구에 직접 와서 하라며 무시하였다.



▲101번\_ 진압 후 V자를 그리며 단체로 기념촬영하는 경찰들

## 8)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처 부족

주민 다수가 고령의 여성이고 오랫동안 농성을 이어오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움막이 위치한 곳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127번과 129번의 경우 매우 좁은 도로가 근접해있고, 101번은 아예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여 40여 분 등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상황 발생시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부족하고 미숙하였다.

### <사례1>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고 고착공간에 방치

115번 농성장에서 허리부상을 입고 초기에 호흡곤란 증세도 보였던 강\*\* 씨의 경우, 경찰은 주위에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강\*\* 씨를 구급차 가까이로 이동시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고착시켜놓은 공간 안에 방치하였다. 연대자들이 경찰들에게 들것을 빨리 갖

다달라고 요구했지만 5분 여 동안 기다려야했다. 강\*\* 씨가 있던 공간에 여러 명의 연대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데려다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강\*\* 씨 위로 다른 연대자들이 넘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응급 후송될 때까지 강\*\* 씨는 강한 햇빛을 그대로 쬔면서 심한 흠먼지 속에서 그저 바닥에 누워있어야 했다.

#### <사례2> 119 이외에 의료진이 없는 대집행 현장, 그나마 119의 진입까지 지체됨

127번 농성장의 경우 농성장 10미터 아래 지점에서 실신한 상태의 주민과 함께 대책위 활동가와 수녀가 고착되어 있었다. 대책위 활동가는 주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119를 요청하였다. 우선 들 것을 가져와서 119가 들어올 수 있는 지점까지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들것이 없었다. 모포로 감싸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옮기려고 하는 경찰에게 무리하게 옮길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으니 119 대원이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119 대원이 주민을 응급후송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상황 종료 후, 길가에 구급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대기 중인 구급대원에게 119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구급대원은 몇 개 지역에서 구급차가 동원되었지만, 127번 현장까지 도로가 매우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한 대가 올라가면 다시 한 대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사 차량들이 오가면서 구급차 운행이 뒷전으로 밀렸고 좁은 도로에 경찰 병력이 줄지어 앉아 있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근무교대를 하는데 127은 행정대집행이 9시 경에 진행이 되어 늦어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집행 현장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지만 대기 하고 있지 않았다.

101번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산 속에서 다수의 응급환자들이 발생하였다. 의료지원을 위해 현장에 함께 있다가 바깥으로 끌려나온 의료지원단이 응급환자들에 대한 긴급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착상태를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며 가로막았다. 또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가 고착상태에서 나가는 것도 제한하여 거센 항의를 받았다.



▲127번\_ 호흡곤란을 겪던 주민은 약 30분 만에 응급후송될 수 있었다.



▲101번\_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4명의 응급환자는 헬기로 이송되었다.

## 9) 주민재산 훼손

오랜 시간 농성을 해오면서 움막 안에는 주민들의 재산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과 밀양시청은 움막 철거 과정에서 안에 있는 물품들을 함부로 치우면서 파손시켰다. 철거작업 이후 주민들에게 물품을 어떻게 회수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또한 움막 철거를 위해, 그리고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포크레인을 실은 각종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밭을 지나면서 한해를 사는 생계수단인 밭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 <사례1> 움막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에 해당하는 물품들도 모조리 철거

129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움막을 포함해 각종 생활용품, 기자재들이 파손되었다. 어르신들의 지팡이와 신발, 그리고 가방, 지갑, 휴대폰 등 당장 이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달라는 요구에는 알았다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밀양시청 공무원이 실제로 없는 물건인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말해 주민들이 항의했고, 결국 4시간이 넘도록 기다린 끝에 자루에 쓰레기처럼 처박힌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내었다. 이후 파손과 분실 등의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에 밀양시청 공무원이 그러겠다고 답하였지만, 주민들은 이미 파손된 것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였다.



▲129번\_ 끌려나온 뒤 가방을 돌려 달라 몇 시간을 요구했던 주민, 그 뒤로 공사차량이 쭉 이어져있다. 몇 시간 싸우고 나서야 집기가 담긴 자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사례2>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수단인 밭, 양식장 훼손하며 재산권 침해

115번 움막 철거에 필요한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농성장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민들의 밭은 엉망이 되었다. 일체의 보상을 거부하면서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해온 주민의 밭이 엉망이 되면서 주민의 생계가 크게 위협 당하는 상황이다.

101번 오후 6시 30분 경 한전의 헬기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저공비행을 지속하였다. 헬기가 일으키는 바람에 의해 먼지를 비롯하여 온갖 것들이 날라오면서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전 직원은 성의 없는 한마디 사과를 했을 뿐이었다. 해가 저물면서 주민과 연대자들은 움막을 철거하면서 가져가는 물품들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하산하였다.

이 날 오후, 101번 농성장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한 양식장에서는 반복되었던 한전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은어 5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양어장을 운영해온 주민이 말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여 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115번\_ 인근에 위치한 주민의 들깨밭 위로 공 ▲101번\_ 인근 양식장에서 6월 11일 헬기의 저공비행 포크레인이 지나가서 김을 매놓은 게 엉망이 행 영향으로 5만여 마리의 은어가 집단폐사 되었다며 주민의 설명

### 3. 결론

밀양인권침해보고서만 벌써 네 번째다. 밀양에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목록은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그 가지 수와 정도만 더해가고 있다.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년간 정부에 버림받았던 설움과 경찰, 한전직원들에 의해 자행된 모욕과 폭력을 글과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다. 주민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와 한전의 대답은 한결같다. ‘국책사업’, ‘공익사업’ 그러기에 오직 언제나 공사 강행뿐이다.

지난해 7월 두 달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첫 번째 보고서를 냈다. 당시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 여러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선언들, 그리고 밀양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건과 생생한 증언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송전탑 건설 타당성 재검토’, ‘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예방과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권고가 철저히 무시된 채 지난 6월 11일 강행된 행정대집행이 그야말로 ‘대집행’됐다.

####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과 기본권 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의 목표 하에 ‘최소한도 내 행사’라는 경찰의 ‘직무와 원칙’은 행정대집행 전 과정에서 실종됐다. ‘인권’과 ‘존엄’을 비웃는 듯 공사 강행을 위해 닥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경찰이 아닌 ‘철거용역’만이 있었다.

안전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경찰은 단시간에 주민과 종교인, 연대자들을 제압하였다. 진압 과정 전반의 기조를 폭

력적인 제압으로 삼으면서, 속출하는 부상자를 후송할 응급조치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필요최소원칙을 무시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으로 주민과 많은 시민들은 이동의 자유, 생존권,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와 연대의 권리를 차단당했다. 경찰 채증에 관한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기본적으로 영장을 가지고서 정복 착용 상태로 식별표시와 함께 최소한의 사용)를 무시한 채, 모든 과정에서 위협적인 채증과 한전직원 등의 권한 없는 채증에 대한 묵인은 계속됐다.

대화를 먼저 하자는 호소도, 통행 제한의 근거와 이유를 따져 묻는 항의도,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라는 당연한 요구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종교의 자유도, 연대의 권리도 6월 11일 현장에서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5조, 6조 등 단 몇 마디로 유보시켰다. 폭력적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상흔이 새겨져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압 작전을 성공적이라고 자축했던 경찰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폭력 집단과 다를 바 없는 경찰의 모습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어디에서도 ‘죄송하다’는 간단한 사과의 말조차 들을 수가 없다.

**경찰력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침해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수행과정에 대한 책임**  
이번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목격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인권법과 규약, 선언들은 ‘평화를 해치고 반인도적인 범죄’, 특히 ‘그 수행에 연관된 행위’도 범죄라고 규정한다. 언제나 예외조항을 확대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종시키는 경찰,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들을 그대로 둘 것인지 밀양에서 국가폭력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 물음에 국가는 대답해야한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공사 강행을 멈추고, 송전탑 투쟁 10년 동안 대화를 요구해온 밀양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유실된 인권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 매우 늦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웃음으로 환원하는 힘’을 가진 밀양주민들이 우리에게 쏘아올린 공존의 신호에 답하는 인간의 조건일 것이다.



## ■ 불임자료

### 2014년 6월 10~11일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지

#### 129번

##### \* 6월 10일 상황

- 12:00 경찰이 장동 입구 및 129번, 127번 철탑부지 통하는 마을 입구 출입통제 시작.
- 13:00 대전에서 온 수녀 8인이 장동 입구에서 출입통제 당함. 경찰이 밝힌 통제 이유는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사고예방'을 위해 통제하고 있다고 함. '송전탑 관련 민원이 들어와 막고 있다'고 한 경찰도 있음. 경찰관계자는 수녀들이 타고 온 차량에 대해 '견인'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
- 16:00 KBS 중계차량 장동입구 도착. 조경태 국회의원 장동입구 도착. 수녀 출입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와 협의.
- 17:00 수녀 여덟 분 중 네 분이 조경태 의원과 함께 농성장 도착
- 18:00 장동입구에서 김밥 등 농성장 식사반입 통제.

##### \* 6월 11일 상황

- 00:00 변호인 4명 출입 통제.
- 04:00 위양마을(127, 129) 쪽으로 경찰버스 집결 시작.
- 05:00 국가인권위 129번 농성장 5명 도착.
- 06:10 장동입구 움막철거 시작. 주민 7~8명 고착.
- 06:30 평발마을 농성장 행정대집행 고지. 변호인들 이름, 직위 밝힐 것을 요구함. 변호인들 농성장 입구에 고착.
- 06:40 경찰, 토굴진입 시도. 수녀와 연대자들 차례로 끌어내림.
- 07:00 토굴에서 여성주민들이 옷을 벗고 저항하고 있음에도 남성경찰 투입. 토굴 시설 물을 경찰이 커터, 칼 등을 이용해 철거. 토굴에 있던 주민, 끌려나오기 시작. 에반젤 수녀 부상(병원후송). 토굴에서 끌려나온 주민들 밖에서 격렬히 저항 지속.
- 07:20 토굴주민 모두 끌려 나옴. 남아있는 연대자들 끌어냄. 움막철거 시작. 밀양서 정보계장이 움막 밖으로 끌려나와 울부짖고 기도하는 수녀들과 주민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처벌 할 수 있으니 자진 해산하라는 경고 방송 두 차례 실시.
- 07:50 경찰, 평발마을 주민 배수철씨를 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이유로 체포. 김해중부서로 이송. 주민, 연대자, 수녀 모두 평발마을 입구로 사지 들려 내려옴. 이후 경찰병력으로 고착시킴.
- 08:00 다윗수녀 팔 골절 호소. 병원 후송.
- 08:20 평발 쪽으로 올라오던 경찰(스타렉스)차량이 신원을 확인하는 감시단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감시단 발을 바퀴에 끼게 함. 강력히 항의 후 신원확인, 공식사과 받아냄.
- 10:00 평발 쪽으로 포크레인 실은 화물차 진입을 주민, 수녀, 연대자들이 막음. 주민들 분실물 찾아줄 것을 경찰에 요구.
- 13:00 경찰, 포크레인 통행을 위해 평발마을 입구 쪽 주민, 연대자들 길 양쪽으로 고착

시킴. 김미희 의원 중재(?)로 물품확인 하기로 함. (행정대집행법 위반여부 확인)

- 15:00 분실물 되돌려 받은 후 주민, 감시단 현장에서 나옴.

## 127번

### \* 6월 10일 상황

- 127번 움막으로 가는 길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기 전 날인 10일부터 통행 제한이 이루어져 연대자와 식사를 전달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변호인들까지 광범위 하게 통행 제한이 이루어짐.
- 11:50 경찰력이 북북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같은 날 정오 경부터 장동 움막 입구에 경찰버스 19대(식당차 1대 포함), 승합차 8대가 도착해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
- 18:30 연대자 2명이 127번 움막에 전달할 김밥을 가지고 와서 통행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통행을 제한함.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 김밥을 전달할 수 없으며, 움막에서 직접 받으려 내려와야 한다면 전달을 거부했다. 대책위 상황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경찰서장에게 연락하여 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나, 장동 움막 앞 경찰 지휘관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음.
- 19:00 사복을 입은 경찰이 “배고프면 내려오면 되지 뭐”라며 빈정거림. 이후 경찰이 직접 장동 움막 앞까지 김밥을 전달. 같은 시각 연대자와 경찰력 모니터링을 온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가는 통행 제한으로 산길을 올라야 했음.
- 통행 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연대자들이 위험한 산길을 타고 움막으로 향했으며, 일부 연대자의 경우 2-3시경에 127번 움막에 도착. 또 다른 십여 명의 연대자들은 10일 11시경 출발해 다음 날(11일) 새벽 6시경에서야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129번 움막에 도착.

### \* 6월 11일 상황

- 00:50 경찰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변호인의 통행을 제한. 변호인들이 주민들의 위임장이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계속 통행이 제한되었으며, 국회의원과 함께 경찰의 통행 제한을 통과한 변호인 1인을 제외하고 변호인 4명이 밤길에 위험한 산행을 함.
- 새벽 네 시부터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어 마을 주민 및 연대자들은 새벽 3시경부터 깨어 있었음. 실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시각은 오전 8시 50분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는 순간부터 움막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과 수도자들을 모두 끌어내는 데 약 2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음.
- 05:00 움막 속에 주민 8명, 수녀 4명, 신부님 1명, 의사 1명, 연대자 3명(총 17명)이 있었고, 이들 중 3명은 움막과 외부가 연결되는 통로 밑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음.
- 05:2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4명이 도착.
- 05:35 김제남 의원이 도착.
- 08:40 아래 움막 주변에 경찰, 시청 공무원, 한전 직원이 모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
- 08:50 대집행 영장을 책임자가 낭독. 1-2분이 지나지 않아 대집행 영장을 읽은 책임자가 움막으로 연결되는 구덩이 다리 앞으로 접근하려는 순간 움막 뒤편에서 경찰이 들어오고 있다는 고함소리가 들림.

- 08:53 순식간에 움막 4면 모두에 움막이 뒤흔들릴 만큼의 병력이 배치되어 해체 작업 시작.
- 08:55 움막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세 명이 경찰의 진입을 막음. 움막 입구 바로 뒤편에는 통나무 위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고, 장작더미 아래에는 세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음. 장작더미가 무너지면 아래에 있는 농성자들이 깔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체작업은 계속됨. 움막 문을 통해 진입하기 위해 경찰이 무리하게 이 세 명을 구덩이 방향으로 밀어내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킴. 움막의 4면 모두에서 모두 절단기와 가위를 가지고 움막 해체작업이 진행되었고, 목에 맨 쇠사슬이 움막의 뼈대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과 농성주민, 연대자들이 뒤엉켜 손과 다리 위, 머리 위와 목 뒤로 절단기가 오가는 상황이 반복.
- 09:00 장작더미가 쌓인 움막 옆면과 움막 정면에서 경찰이 움막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장작더미 아래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
- 09:04 움막 안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 쇠사슬 해체작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경찰이 기자들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기자와 경찰이 허리에 쇠사슬을 맨 수녀와 고령의 주민 위로 한꺼번에 쓰러짐. 기자들이 강력히 항의
- 09:08 김제남 의원 보좌관이 사지가 들려서 강제로 ‘이동조치’ 됨.
- 09:13 움막 안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겠다는 변호인을 제지. 덕촌 할머니를 시작으로 움막 안에서 쇠사슬을 묶고 있던 연대자 및 농성 주민, 수녀들이 실려 내려오기 시작. 움막 안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보임.
- 09:24 10여 명이 아래 움막 인근 10미터 부근에서 고착되어 있었고, 이후 고착이 풀린 후 대오는 129번으로 이동.

## 115번

### \* 6월 10일 상황

- 20:00 경찰이 농성장에 차를 타고 들어가려는 수녀들과 인권침해감시단의 출입을 막고, 농성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한 후 걸어가도록 함
- 22:00 천주교 신부 한 명이 농성장으로 가려는 것을 경찰이 저지함.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현식 대장(경비교통과 작전의경계장)은 신부에게 농성장에 가려는 이유를 물었고 신부가 “밀양 주민과, 수녀들과 연대하는 종교활동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자 김현식 대장은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함. 주민과 연대자들은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경찰이 종교인의 양심을 재단하려는 발언에 대해 사과 할 것을 요구함. 경찰은 사과하지 않았고 한 시간 가까이 신부를 억류하다가 농성장 출입을 허용.

### \* 6월 11일 상황

- 10:30 공사현장 오려던 연대자(민주노총 6인)를 경찰들이 통행금지 시킴. 개인별로 고착하여 현장 접근 막음
- 12:00~12:10 구급차 4-5대 현장 투입.
- 12:15 한전 직원, 시청 직원 현장 투입. 경찰 서장 지휘 하에 경찰 병력 현장 투입 시

작.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는 주민(할머니 2분) 통행 금지함.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할머니 한분 탈진함.

- 12:30 농성장 움막 해체 시작. 50여명의 주민과 수녀, 연대활동가들이 움막 안에 있는데도 해체 작업 진행. 현장에 들어가려는 인권침해감시단도 접근 방해하며 고착시킴. 해체 과정 중 취재 기자들이 현장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며, 일부 경찰이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침. 기자가 강력히 항의하자 접근 허용.

- 12:55 해체 작업 종료. 이후 주민과 연대자들에게 해산고지 하지 않고 경찰들이 이들의 사지를 들어 이동시키는 등 강제적으로 해산. 이 과정에서 사랑의씨튼수녀회 김\*\* 수녀(팔 골절)와 서울에서 온 연대자 강\*\*씨(허리 부상)가 구급차로 제일병원으로 후송. 철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대다수가 한전, 시청 직원들이 아닌 경찰이었음. 경찰기동대원 1인이 주민 끌어내 고착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발로 찬. 발로 찬 기동대원을 경향신문 기자가 사진으로 확인시켜줌. 해당 기동대원에게 사실 확인과 성명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자리를 피함.

- 13:30 철거 마무리 과정에서 현장을 봉쇄하고 주민과 연대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몰아냄. 안전을 확인하려는 연대자를 현장에 들여보내지 않고, 일부 주민과 천주교 사제의 경우 경찰이 사지를 들어 강제적으로 현장 밖으로 끌어냄. 주민 및 연대자들을 움막에서 끌어내서 움막 밖 장소에 고착. 퇴로를 막고 빙 둘러싸 실질적 체포감금상태. 인권침해감시단과 변호인이 퇴로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감시단과 변호인도 고착. 체포된 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요구했으나 근거 제시 없이 접근 막아 변호인 접견권 침해.

## 101번

### \* 6월 10일 상황

- 오후부터 용회마을 입구와 농성장이 있는 산 입구 통행 제한(주민 외 경찰청 발급 비표 없인 통행금지).

- 19:00 인권침해 감시단 2인 용회마을 입구인 용회교에서 통행 제한 됨.

- 주민 외에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과도한 통행 제한의 이유가 무엇인지

- 농성장에 저녁식사를 갖다 주겠다는 것도 막을 것인지

- 인권침해감시단이 농성장에 가려는 것은 인권옹호활동을 위한 것인데 이조차 보장하지 않을 것인지

위 세 가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경직법 5조에 의해 통행을 제한하며, 식사는 용회교까지 농성자가 와서 받아 가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활동이라 해도 비표 없이는 통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음.

- 대책위가 국가인권위에게 저녁식사 반입관련 요청하자 국가인권위, “경찰이 가져다주면 안되겠냐”고 답변함.

### \* 6월 11일 상황

- 산속에 고립되어있는 101번 농성장을 염려한 시민들이 경찰에 의한 통행 제한으로 길이 아닌 곳으로 산을 타고 새벽에 도착하여 농성장에는 50여명이 있게 됨.

- 새벽 6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인권침해감시단과 법률지원단의 변호인들이 행정

대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권리와 안전을 위한 당부 등을 공유함.

- 15:50 101번 농성장 보라마을 통한 길로 경찰 올라와서 대기 시작, 주민들 항의. 정보과장 주민들에게 막말. 주민 및 장하나 의원 보좌관과 충돌.
- 16:05 김수환 밀양경찰 서장을 필두로 경찰과 뒤이어 시청 공무원들이 농성장에 진입. 배\*\* 변호사가 확성기를 통해 '적법절차를 밟을 것과 부상없이 진행할 것 그리고 인권침해감시단의 인권옹호활동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16:08 농성장 지붕 위에서 천주교 신부가 서장에게 면담 요청. 이에 대한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의 답변은 "(면담을) 하고 안하고는 내 마음이니까 (내려와 자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라."
- 16:10 주민들이 충돌 없는 상황에서의 경찰 채증 및 시청과 한전 직원의 채증을 중단할 것 요구함.
- 16:12 계속해서 서장 면담 요구. 장하나 의원 보좌관 '대집행 주체는 시청임을 확인한다. 한전 직원들은 빠질 것' 요청하며 한전 직원들에게 대집행 하러 온 것이냐 묻자 '공사하러 왔다' 대답함. 경찰이 농성장을 둘러싸려 왼편으로 움직이자, 주민 고\*\*씨가 '경찰이 먼저 움직이지 말고 밀양시청이 진행하라' 요구.
- 16:20 경찰 무전 '한명씩 담당하라'
- 16:25 시청 행정대집행 낭독, 경찰 농성장 둘러쌈.
- 16:30 경찰, 농성옴막 바깥쪽 둘러앉은 20여명의 사람들부터 들어내기 시작, 응급환자 발생과 조치를 의료지원단이 요청했으나 목살됨.
- 16:35 옴막 안에 경찰 투입, 농성자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압은 남성경찰이 었음. 경찰이 농성자를 붙잡고선 쇠사슬을 끊고 보란 듯이 커터로 옴막을 찢기 시작.
- 16:45 경찰이 끌어낸 주민들과 연대시민들 고착시키고 변호인의 접견 거부. 옴막 지붕 진압시작, 응급환자 다수 발생. 이중 4인 헬기로 긴급 후송. 벌목과 기초 작업 진행을 위해 경찰이 주민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고 고착시킴.
- 17:30 시청 직원 철수.
- 18:30 한전 헬기의 의도적인 저공비행으로 주민들 사과를 요구하며 격렬 항의.
- 19:00 한전 직원 성의 없는 한마디 사과로 주민들 항의. 폭력진압 규탄 정리 집회 후 물품을 잘 보관하고 이동시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들 하산, 상황종료.



## II . 6.11 행정대집행 법률적 검토의견

### 1. 경찰의 주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조치

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경찰의 주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의 권원이 무엇인지, 해당 조치가 적법한지가 문제됨.

나. 당시 경찰병력은 현행범체포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미란다원칙 고지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행사도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스스로 체포행위를 부인함. 만약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한다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임.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1항에 따른 즉시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2) 경찰은 직접적 위험발생 야기자인 밀양시 공무원의 안전조치 미확보, 점유 미확보 상태의 철거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간접적 위험야기자인 주민 등에게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3) ① 주민 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은 정당성은 인정될 수도 있음.

② 그러나, 주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서는 1차적으로 명도단행가처분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조치와 점유를 확보하도록 밀양시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어야 하며, 안전조치 없이 진행하는 밀양시의 철거행위를 제지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함.

③ 특히, 대집행의 경우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명도행위는 할 수 없기에 이러한 명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도단행가처분 등을 통해서 철거 상 발생한 위험과 점유를 확보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밀양시의 대집행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대집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예방목적으로 주민 등에게 즉시강제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함.

④ 또한,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이 제어케이블 불량에 따른 대체과정에서 미국 공급회사의 케이블 공급문제로 인하여 2015년 말경에야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송전선로 공사의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럼

에도 대집행을 강행하는 밀양시의 행정력에 경찰병력이 경직법상의 즉시강제를 주민 등에게 실시한 것은 위법함.

라. 결국 경찰의 강제퇴거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처분으로 위법하며, 직권남용에 해당함.

## 2. 경찰의 주민 등에 대한 통행제한·분리고착·지장물철거

가. 통행제한

경찰은 주민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나. 분리고착·지장물철거

경찰은 주민 등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주민 등을 억류(분리고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막을 찢는 등 지장물의 철거를 행하였으나, 경찰의 강제퇴거행위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강제퇴거에 뒤이은 억류(분리고착)·지장물철거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다. 위 행위들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함.

## 3. 변호사 접견·교통권 침해

가. 그간의 여타 행정대집행(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 서울 중구청의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등)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예에 비추어 보면,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나.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될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는 즉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인(당시 변호사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정식으로 선임되어 변호인선임제도 소지하고 있었음)들을 마을 주민들로부터 분리, 고착시킨 행위는 체포된 혹은 체포될 마을 주민들의 접견·교통권을 미리 봉쇄하는 동시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다. 변호사들은 마을 주민들이 체포, 연행 될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경찰은 변호사를 분리, 고착시킨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착된 장소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막아둠.

라.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감금죄 성립 여지가 있음(특히 1항에서와 같이 경찰의 즉시강제 행위가 위법하다면 변호사에 대한 고착은 그 자체로 불법 체포·감금 행위임이 더욱 명확해짐).

#### 4. 대집행 후 소유물 미인도

가. 손실감소노력의무 위반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7조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공무원 등은 철거의무자의 소유물을 훼손하고, 철거 후 철거의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물건의 목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철거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감소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

나. 인도의무 위반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7조는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대집행 책임자는 철거의무자의 소유물 중 일부만을 인도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및 대집행 대상인 지장물인 움막의 잔해는 폐기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 5. 대응 방안

가. 1, 2, 3항 관련 경찰행위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

나. 4항 관련 밀양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

#### 6. 결론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신 집행하는 행정대집행의 취지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강제처분을 통한 점유의 반환, 강제퇴거를 행한 금번 대집행의 위법성을 확인함. 그 과정에서 과도한 통행제한, 분리고착 행위, 경찰의 지장물 직접 철거,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침해, 무분별한 채증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 또한 대집행 전후하여 의무자의 재산을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였음. 끝.